

# “군부대도 가습기살균제 전방위 사용”

## 특조위 “육·해·공군과 국방부 산하기관 12곳서 800여개”

### 27~28일 진상규명 청문회...국방부 관계자 증인 채택

군 부대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만든 가습기살균제가 광범위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가습기살균제참사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2000년부터 2011년까지 약 12년 동안 육·해·공군과 국방부 산하 부대기관 12곳에서 문제가 된 애경산업의 ‘가습기 메이트’ 등 3종의 가습기살균제를 800여개 이상 구매하고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지난 7월부터 군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실태 조사에 착수했으며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고 사용한 증거와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군병원의 경우에는 국군수도병원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가습기메이트’를 각 290개 구매·사용했으며 국군양주병원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같은 제품을 112개를 구매·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국군양주병원에서는 군병원 병동에서 생활한 장병 가운데 실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정황이 드러났다. 군 복무 중이던 이모씨(30)는 지난 2010년 1월에서 3월까지 국군양주병원 입원 당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됐고 실제 폐섬유화 진단을 받았다. 그는 2017년에 폐손상 4단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공군은 기동군사훈련단에서 ‘가습기메이트’를 2008년 10월에 390개를 구매하고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공군 제8전투비행단에서는 2007년과 2008년에 ‘육시썩썩 new 가습기담뽀’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다.

육군 제2사단에서도 공군과 동일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중대 생활관 내에서 사용됐다. 또한 해군교육사령부와 해군작전사령부, 해군사관학교,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7개의 가습기살균제가 쓰였다.

최예용 특조위 부위원장은 “군은 적어도 지난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 이후에는 군대에서 살균제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파악하고 피해자를 조사해야 했다”며 “이제라도 실태를 조사하고 노출군인 중에 피해자가 없는지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조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특조위 17층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방부의 안일했던 대처를 지적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2011년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처음 확인된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국방부에 대처를 요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때 국방부는 문제가 되는 가습기 살균제를 회수 조치하겠다고 회신했고, 이 회신이 국방부가 취한 조치의 전부라는 것이 특조위의 설명이다.

최예용 부위원장은 “2011년 이전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것 자체가 군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습기 살균제 사용 문제에 대해 국방부가 이래라도 파악하고 피해조사에 나서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27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시청에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국군의무사령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에 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하얗게 핀 소금꽃**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9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공생염전에서 염부가 소금을 수확하고 있다.

## 정부, 건설현장 사고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실시한다

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를 맞아 대규모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불시감독을 실시,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사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도 안전공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오는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부가 고강도 점검을 실시하는 이유는 올해 상반기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65명 중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14명(23.5%)의 사

망자가 발생한 12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 국토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가 많은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 약 300곳에 대해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산하기관인 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의 공공공사는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와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국조실 관계자는 “‘사망사고=집중 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2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 3만여곳에 대해서는 고용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을 실시 중이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 2200여곳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추락방지 조치가 없는 공사장은 즉시 설치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통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외에도 50억원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을 1.5% 저리로 빌려주는 등 지원을 확대한다.

또 광역·기초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한다.

## 여순사건 재심 세번째 공소사실 특정 안돼

여순사건 재심재판의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에도 검찰이 피고인의 유무죄를 증명할 만한 공소사실 특정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정해 공소사실 특정에 관해 논의하기로 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경아)는 19일 오후 2시 여순사건 재심재판 세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를 할 수 있도록 정한 기일이다.

이날 재판에는 재심청구인인 장경자씨(73·여)와 장씨의 모친 진진순씨(96)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지난 7월15일 공소사실 특정을 위해 국가기록원과 진실화해위원회, 경찰청, 국방부 등에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조회 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아직은 회신을 받지 못하고 상당기간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1



## 이슈 판결

### 등기공무원 실수로 비싸게 사서 판 경매...대법 “국가배상 청구못해”

등기공무원 잘못으로 제값보다 비싸게 건물을 사들여 제3자에게 판 경우, 현실적 손해를 입은 건 최종매수인이라 중간매도인은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해야 할 손해는 ‘현실로 입은 확실한 손해’에 한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현실적 손해 발생 여부를 살펴본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소 2014년 6월 소 유권이정등기를 마쳐줬다.

그런데 402호는 1999년 6월 등기부가 전산으로 옮겨지려는 과정에 등기공무원 과실로 실제로는 708.1㎡분의 32.9인 대지지분이 65.8로 잘못 기재됐다. 정씨가 이를 사들일 당시 감정평가도 잘못된 대지지분을 전제로 이뤄졌다.

이에 M사가 같은해 8월 등기부에 기재된대로 부족한 지분을 취득해 이적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자, 정씨는 등기공무원 잘못으로 인한 초과지분을 취득하는데 든 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국가 측은 “정씨의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

했다.

하지만 1.2심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존재했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라며 “정씨는 등기부에 표시된 대지면적 절반만 취득했으니 토지지역의 절반인 2265만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등기 실수로 제값보다 비싸게 402호를 사들였으니 그 차액만큼 정씨가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 국가와 경매채무자가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씨가 매매대금을 과다지급했다거나 M사로부터 부족지분 이전을 요구받은 것만으로는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등기공무원 과실로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했지만, 이후 M사에 잘못 기재된 대지지분을 전제로 402호를 팔고 자신이 낸 매수대금 이상의 매매대금을 받은 점을 들어 “최종 매수인인 M사가 국가의 불법행위로 매매대금을 초과지급하는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간매도인인 정씨는 M사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손해배상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등 현실적·확정적으로 실제 변제해야 할 성질의 채무를 부담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1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어는요... 자라치로에게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회가 한정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라치로발판, 자라치로, 영민 민력어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전화번호 129] [고객센터 1577-1000]